

# ‘화물자동차 불법증차시 5년 취득 제한’

### ‘불법증차 근절법’ 국회 국토위 통과… 정동영 의원 “화물운송시장 정상화·국민세금 낭비 막는 길”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불법으로 판매하여 수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근절시키고 화물자동차 불법증차를 근절시키는 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의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하고,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범망을 피해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화물운송시장은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후 신규허가가 사실상 제한되면서 화물자동차 번호판에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특수용도형 차량을 대폐치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여 공급제한차량으로 불법 증차한 후 시장에 공급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8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를 대대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3만 5,000대에서 4만 5,000대의 불법증차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화물자동차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온라인 대·폐차 확인시스템 구축, 불법증차 의심차량 전수조사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운송사업자가 영업정지를 받은 이후 주 사무

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변경허가를 받는 등 범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매년 1조 7,000억원 가량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역시 상당 부분 불법증차된 차량에 지원됐을 것”이라며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문제를 해결해야 화물운송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으며,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 또 구속적부심 석방

### 긴급체포 ‘위법’ 논란

법원이 구속적부심에서 또 석방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공개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위법한 긴급체포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법원의 석방 취지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한국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씨에 대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조씨에 대해 석방을 명령하면서 이번 긴급체포 자체를 위법하게 봤다. 긴급체포는 정말 긴급한 사유에 요건을 갖춰 해야 하는데, 이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씨의 경우 10월13일 스스로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석했다가 14일 새벽 긴급체포 됐다. 이 때가 두 번째 출석조사였다. 조씨와 함께 체포된 협회 간부는 조사 종료 후 석방됐다. 이후 검찰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0월15일 영장심사에서 구속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기본적인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검찰 조사에서 긴급체포되기 전 조씨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스스로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고, 대부분 범행을 인정한 사람에 대해 긴급체포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수사 기관의 효율성을 위해서 긴급체포 후 구속하는 식으로 해왔는데, 관행적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구속편의주의적인 관행에 제동이 걸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검찰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전날 “긴급체포를 적법하게 했고 그래서 영장전달판사도 영장을 발부한 게 아닌가”라고 물은 뒤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그런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한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뉴스



JSA 경비대대·미국중 교수 초청 차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귀순 북한 병사를 구조한 JSA 경비대대 지휘관 및 장병, 미국중 이주대 교수를 초청해 차담회를 하고 있다.

## “서예 진흥과 민족문화 창달의 계기로 삼겠다”

### 유성엽 교문위원장,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국가적 시책 마련·지원 가능해져

대한민국 서예계의 오랜 숙원인 서예 진흥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지난 1일 서예 분야에 대한 국가적인 시책 마련과 지원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서예진흥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되는 서예진흥법은 ▲5년 주기의 서예 진흥 기본 계획 수립(안 제4조) ▲한국서예진흥 재단 설립(안 제5조) ▲서예교육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6조) ▲서예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발굴 및 양성(안 제7조) ▲서예

해의 홍보 및 전시회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안 제8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예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정책의 시행과 국가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서예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해지고, 서예의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발의에 나선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영화, 음악,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진흥법이 각각 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이뤄지고 있으나, 서예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전무했다”며, “더 늦기 전에 본 법안의 제정하여 서예를 활성화시키고,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한 축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서예 진흥과 민족문화 창달의 계기로 삼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본 법안의 발의에는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야 3당의 의원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하여 총 55명의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에 나섰다. /김진성 기자

## “약용작물산업 체계적 관리 필요”

### 김종희 의원, 발전 기본법안 대표발의

“우리나라의 약용작물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무분별하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희 의원(김제,부안)이 약용작물산업 발전 기본법안을 제정, 대표 발의한 취지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약용작물은 전통적으로는 대부분 한약재로 이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식품용, 의약품, 산업용 등으로 활용되어 그 소비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어 시장규모 역시 확대되어 왔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농림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실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농산물, 식품, 한약재 등) 및 유통과정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로 일원화된 관리 및 지원체계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현재의 실정을 개탄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약용작물 관리 및 재배 체계를 보면, 약용작물 개별 단일 품종을 기준으로 사업 규모가 크지 않아 약용작물산업에 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어려운 근본적인 구조”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러는 동안 우리나라 약용작물 시장은 값싼 중국산 약용작물로 매년 점차 잠식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도 국가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워 국회 의원으로서 이 법을 제정,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약용작물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약용작물산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나아가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 자신도 “앞으로 약용작물산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김종희 의원

## 도의회 예결특위, 효율적인 예산심사 위한 연찬회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순창 정류체험관에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한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는 2018년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17년도 전라북도 제2회 및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마련됐다. 예결위는 4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사전 학습과 토론을 거쳐 심사방향 등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위한 자리다.

위원들은 최병관 도 기획조정실장과 박해정 도 교육청 행정국장으로 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전라북도추경안에 대한 개요 설명 청취와 함께 전라북도의회 장영조 운영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으며 심도 있는 질의와 집중적인 토론을 펼쳤다. /김진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자연과 사람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세계 최고의 자연생태도시, 고창군

고창군관광사슴지